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은은한 야경이 광주 도심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전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시재생특별위 민간위원 13명

## 호남출신 '0'

정책 결정·예산 배정 소의 우려

정부가 최근 구성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가운데 호남 출신 전문가들은 아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 쇠락, 초고층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정책 및 사업 결정, 예산 배정 등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급 인사나 예산 등에서만이 아니라 정부가 인선하는 위원회 명단에서도 호남 출신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했다.

위원회 위원은 모두 29명으로, 그 중 정부위원 16명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관련 부처장관 13명과 문화재청장 등 차관급 3명이 포함됐다.

2년 임기의 민간위원 13명은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토지이용, 건축, 교통, 도시설계, 지역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공교롭게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수도권 대학교수 등이 8명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나머지는 충청권 3명, 영남권 2명 등이었다.

올 상반기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생활형 11곳 등 총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면서 광주 동구, 목포·여수, 전북 군산 등 4곳이 포함됐으나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선도지역 지정 등의 심의를 맡는 위원회에는 정작 지역 출신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생계획 심의, 선도지역 선정, 도시재생방침 결정 등에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드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 문화전당 4개원 완공...이젠 특별법 서둘러야

14일 준공검사·내년 시운전  
민주평화교류원은 리모델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건물이 완공돼 '문화인프라 불모지' 광주에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3일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신축 대상인 4개 건물(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이 완공돼 오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건물이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2005년 첫 삽을 뜬 지 햇수로 10년이다.

<관련기사 2면>

내년까지 전당의 전체 건물이 지어지면 연면적(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으로 따져 국내 최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은 공간이 된다.

완공된 4개 건물 가운데 아시아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을 창작해 선보이는 공연장,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각국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다.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어린이 문화체험장이다. 문화창조원은 문화전문가, 학자들이 협업으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추진단은 4개원의 용도에 맞춰 공간을 꾸미는 내부마감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내년 5월까지 주요 건물의 내부 냉난방, 수도설비, 전자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시운전을 계속한 뒤 7월까지 문화전당을 부분 개방한 뒤 9월4일 전면 개관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전면 완공의 걸림돌은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이다. 이 공간은 옛 전남도청 본관, 상무관, 민원실 등 6개 광주 민주화운동 유적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시공간 확장 등으로 구간구성을 재설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추진단은 최근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명명간 보존공간을 새단장하는 공사를 시작, 내년 8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전당 5개원**
- 1 아시아예술극장**  
세계로 통하는 공연예술의 창
  - 2 문화창조원**  
전문가·학자들 콘텐츠 생산
  - 3 아시아문화정보원**  
각국의 문화자원 수집·연구
  - 4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들의 복합 문화 체험장
  - 5 민주평화교류원**  
광주정신 문화 예술로 승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적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내년 9월4일 개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관 일정이 빠듯함에도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를 쟁기고 기관을 운영할 핵심인력을 뽑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 콘텐츠도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건 중 박해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법안은 "국책사업으로서 위상 악화와 공공성 훼손, 그에 따

운영주체 미정...개관 걸림돌  
전당 운영 전담인력도 못뽑아

문화전당을 정부소속 기관으로 하자"는 광주지역 사회의 여론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정부 소속기관이 되면 수익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문화행사 기획과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지난 2013년 6월 발의된 이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전당운영에 필요한 인력(423명)을 뽑지 못하는 등 개관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도 "올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9월 개관은 어렵다"며 국회에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해자 의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금명간 소관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구성하면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문화전당을 정부소속 기관으로 하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특별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돼 난관이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능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세상을 밝히는 등불  
인문학을 켜자

콘서트와 함께, 길 위에서  
인문학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  
소리 없이 깊어가는 광주의 인문학

**기획**  
자전거, 가을을 달린다

라이더들이 사랑하는 광주전남 자전거 길의 매력  
북한강 자전거길 종주에 도전하다

**문화공간**  
전통과 예술이 만난 특별한 운치  
열린 공간 '최승효 고택'

**문화 화제**  
42년 만에 만나는 화순 이서적벽  
'시인묵객이 반한 절경, 그대 로구나'

**예향 초대석**  
춤의 거목, 이매방  
가장 한국적인 몸짓의 아우라  
빛나는춤외길 인생

마주 앉은 책과 삶  
철학자 이주향  
대중과 철학으로  
소통하는 '유연한 내공'

이달의 아티스트  
'행복한 가을'을 노래하는  
성악가 김동규의 음악이야기

광주전에 퍼진 빛 물결  
2014광주미디어  
아트페스티벌

아시아 스토리 로드 카자흐스탄  
생의 가혹함 건너게 해 준 삶 속의 예술들

우리 명 속삭이 여행  
수줍은 단풍 설레는 국악마을, 영동

스타 데이트  
'나의 사랑, 나의 신부'서 열연, 배우 조정석  
"평범한 한국남자 보여주고 싶었어요"